

제일. 서울은행 정부출자방안

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제도담당관실 500-5354

- ▷ 정부는 최근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
 - o 개정된 "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에 의거하여 두 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와 감자를 동시에 추진하되
 - o 선감자후 즉시 정부출자를 함으로써 은행 영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
 - o 정부출자후 동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매각하기로 결정하였음.

1. 정부 현물출자 추진경위

- ▷ 정부는 '97.12.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일. 서울은행에 대해 각기 1조 1,8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침을 발표
- ▷ 이에 대해 IMF측은
 - o 두 은행 처리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할때, 정부의 현물출자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나
 - o "정부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따라 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"는 의견을 개진
- ▷ 정부는 IMF 의견을 수용하면서 정부출자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"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"을 개정
 - o 제일. 서울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자본금 감액. 주식소각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, 정부의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
 - o 동 명령이나 요청에 의거하여 감자나 증자 등을 추진할 경우, 통상 (상법)보다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함.

- * 통상절차를 따를 경우, 감자에 상당한 시일(14주 이상)이 소요되고 정부출자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제일. 서울은행의 정상화가 사실상 곤란

2. "제일. 서울은행 처리"의 기본방향

- ▷ '98.1 이내에 주주지분 감자 및 정부출자 완료
- ▷ '98.2 이후 정부출자지분의 공개매각 실시
- ▷ 개정법률 시행('98.1 초순경) 후 최단시일내에 제일. 서울은행에 대한 감자 및 정부출자 절차를 동시에 진행
 - o 감자명령과 동시에 정부출자를 요청함으로써 감자로 인한 은행영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예금주들의 불안감을 해소
 - o 금통위의 감자명령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팀을 구성
 - 구성시기 : '98.1.3
 - 구성 : 외국 consultant(부실은행 처리에 관한 선진국 경험 등), 변호사(법률자문), 회계사(자산실사 등 회계적 자문), 은감원 담당자
 - 기능 : 감자(감자비율 산정 등). 출자(출자필요금액 산정 등)와 관련 금통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 추후 정부지분 매각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서도 정부에 대해 자문(IMF와의 추가 협의 사항)
- ▷ 구체적 추진절차
 - (1)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두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고 정부의 현물출자를 요청('98.1월초)
 - (2) 금통위의 감자명령 및 증자요청에 따라 두 은행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증.감자절차 등을 결정
 - (3) 금통위의 출자요청에 따라 정부도 출자에 필요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

(4) 개정 "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신속하게* 감자절차 완료

- * 주총 특별결의 배제, 채권자 이의제기 공시최고기간의 단축(2달 --> 10일) 또는 생략 등

(5) 감자후 즉시 정부의 현물출자* 시행

- * BIS 비율 8%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

(6) 정부출자후 동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매각

- *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인수를 허용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('97.12.29)

◇ 기타 문제

o 자구노력 이행확보

- 정부출자전 은감원에서 제일.서울은행으로부터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징구
- 동 자구계획의 이행상황을 은감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점검

o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있는 경영진의 문책

- "'98.2 정기주총시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있는 경영진을 해임할 것"을 정부출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

o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자산의 매입

- 제일은행 2조 4,356억원(총부실채권의 54%), 서울은행 1조 9,579억원(57%)의 부실채권을 기 매입(11.24)
- '98.2 이내에 나머지 부실채권도 전량 매입

<참고1> "제일.서울은행 감자 및 정부출자방침" 결정 배경

◇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

- o 두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니 만큼
 - 두 부실은행의 기존 주주에 대해 정부출자로 인해 오히려 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므로
 - 일정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기존 부실경영의 결과로 나타난 손실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함.
 - * 손실부담의 정도는 자문팀의 자문을 거쳐 감자비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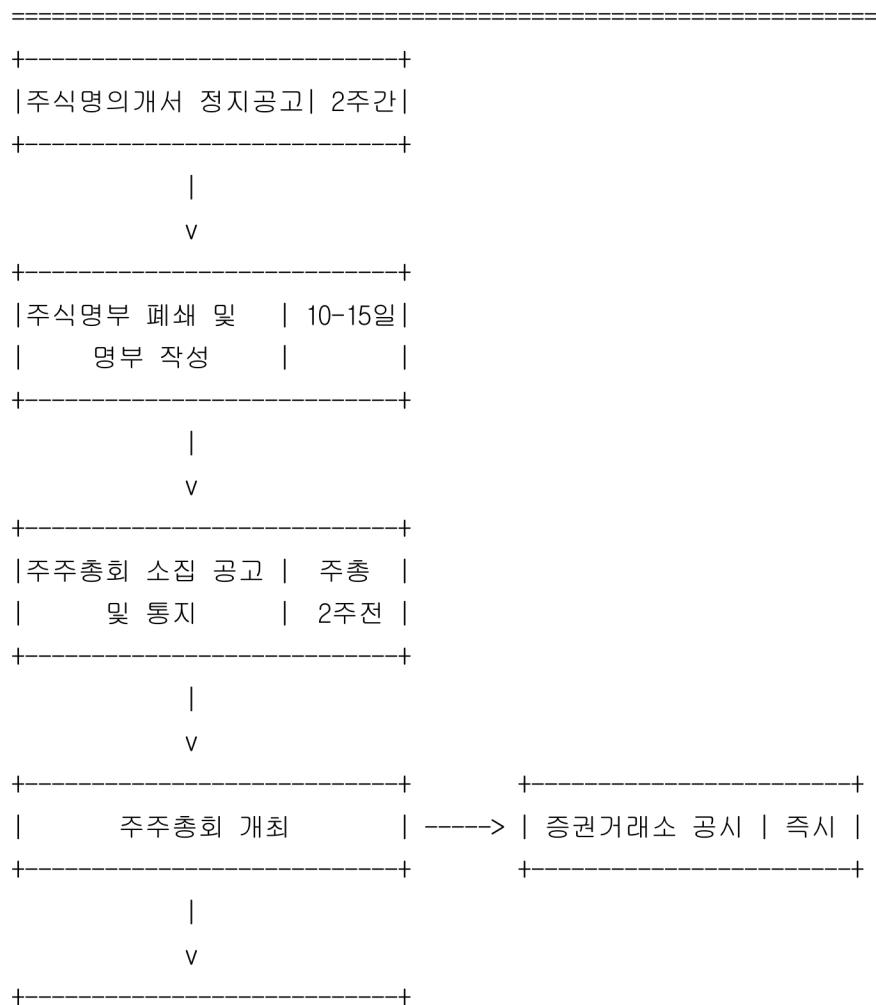
◇ 정부의 현물출자

- o 금융기관을 인가해준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직·간접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음.
- o 수많은 경제주체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못하게 될 경우,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
 - * 제일 : 개인고객(490만명), 기업거래처(77,000개), 국내 점포수(413개)
 - * 서울 : 개인고객(560만명), 기업거래처(101,000개), 국내 점포수(358개)
- o 특히,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파산후 매각시에는 두 은행의 매각조건이 매우 불리해지므로
 - 정부가 두 은행에 출자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정상화를 도모한 뒤(정부가 제3자 인수를 위한 bridge bank의 역할을 담당)
- 능력있는 국내외 투자가에게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.
- o 외국의 경우도 부실은행은 정부가 직접 출자후 매각하는 등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.

◇ 감자 및 현물출자 절차의 동시 진행

- o 감자후 현물출자토록 하되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정부의 출자방침을 확고히 표명
- o 특히, 이번에 제일.서울은행에 대해 행해지는 감자는 감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
 - 정부출자(fresh funding)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행해지는 것임.
- o 감자로 인해 주주에게는 손실이 분담되지만 감자에 이은 정부출자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재고(BIS 비율 8% 충족)될 것이므로
 -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주(채권자)들의 재산이 보장될 것임.

<참고2> 기존법률에 의한 감자 절차도



채권자 이의신고	주총
공고	2주내
+-----+	
v	
+-----+	
채권자 이의신고	공고후
	2개월내
+-----+	
=====	
주) 총 14주(최소)	

<참고3> 제일.서울은행의 자구계획(개요)

◇ 제일은행

(1) 조직 정비 및 인원 감축

- o 본부부서 13% 감축(15부 → 13부)

- o '98.6말까지 총인원 500명 감축

- * '97-2000까지 1,800명(23%) 감축

(2) 인건비 절감

- o 임원임금 30%, 직원 10%-20% 감축

(3) 점포 통폐합

- o '98.6말까지 국내 32개, 해외 9개 점포 폐쇄

(4) 자회사 매각

- o 제일시티리스, 일은신용금고 매각

(5) 자구를 통한 수지개선 금액

- o 약 938억원

- * 자구금액 2.3조

◇ 서울은행

(1) 조직 정비 및 인원 감축

- o 본부부서 20% 축소
- o '98.6말까지 610명 감축
 - * '98-2000까지 1,143명(15%) 감축

(2) 인건비 절감

- o 임원임금 30%, 직원 10%-20% 감축

(3) 점포 통폐합

- o '98.6말까지 국내 31개 점포 폐쇄
 - * '98-2000까지 58점포 폐쇄

(4) 자회사 매각

- o 서울리스, 서은투자자문 매각

(5) 자구를 통한 수지개선 금액

- o 약 617억원
 - * 자구금액 1.3조

<참고3> 북구 3국의 금융위기 및 지원대책

◇ Sweden

- o 위기기간 : '91-'95
- o 발생원인
 - 금융자율화에 따른 lending boom

- 세계개편 등에 따른 거품경제의 급속한 소멸 및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

- * 3 bad : (1) bad policies(거시경제정책, 금융감독 미비)
(2) bad banking(금융기관의 moral hazard)
(3) bad luck(유가하락, 소련경제붕괴 등 경제환경변화)

- o 기간중 거시지표 변동

- 성장률의 하락 : '93년 -2.0%
- 실업률의 증가 : '93년 8.2%
- 경상수지 적자 확대 : '92년 -4.1%/GDP
- '85년대비 주가변동 : 227% --> 47%

- o 진행과정

- '90년중 단기금융회사 부실화
 - > '91년 저축은행 부실화
 - > '91년말 상업은행 부실화로 확산
- 총대출대비 은행수익률 : '92년 -4.6%

- o 정부지원 원칙

-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중점을 두어 대처
 - . 정부기금 또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예산으로 적극 지원
- 최대한 상업베이스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최대한 회수
 - . 정부의 주식인수 및 은행별 자구계획 징구로 기존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
 - . 국제적 컨설팅기관 등 외부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기관의 인원을 최소화
 - . 매수은행지분의 외국을 포함한 일반에 매각, 실현수익을 회수함으로써 일종의 stock option 효과 시현

- o 지원내용

- '92.9월 정부는 모든 은행 지급보증 선언
- '93.5월 은행지원청 설립(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담당)
- 부실채권정리기관 설립('92.11 Securum, '93.10 Retriva)
- 통합 금융감독청 설립('91년)

o 지원규모 : 653억SEK(97억U\$)

* GDP의 4.7%

o 부실채권 정리방법

- 부실채권 : 60일 이상 연체
- 주요 대형부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관이 담당(여타 은행은 자체 정리)

o 정리결과 : Nord 및 Gota은행 합병

<> Norway

o 위기기간 : '91-'95

o 발생원인

- 금융자율화에 따른 lending boom
- 세제개편 등에 따른 거품경제의 급속한 소멸 및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
 - * 3 bad : (1) bad policies(거시경제정책, 금융감독 미비)
 (2) bad banking(금융기관의 moral hazard)
 (3) bad luck(유가하락, 소련경제붕괴 등 경제환경변화)

o 기간중 거시지표 변동

- 성장률의 하락 : '91년 1.6%
- 실업률의 증가 : '93년 6.0%
- 경상수지 적자 확대 : '93년 2.9%/GDP
- '85년대비 주가변동 : 154% --> 35%

o 진행과정

- '91년중 대형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부실화
- 총자산대비 은행수익률 : '91년 -4.3%

o 정부지원 원칙

-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중점을 두어 대처
 - . 정부기금 또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예산으로 적극 지원
- 최대한 상업베이스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최대한 회수
 - . 정부의 주식인수 및 은행별 자구계획 징구로 기존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
 - . 국제적 컨설팅기관 등 외부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기관의 인원을 최소화
 - . 매수은행지분의 외국을 포함한 일반에 매각, 실현수익을 회수함으로써 일종의 stock option 효과 시현

o 지원내용

- '91.3월 정부은행보증기금, '91.11월 정부은행투자기금 설립(정부 출자 담당)
- 은행.보험 및 증권위원회 기 설립('86)

o 지원규모 : 242억NOK(34억U\$)

* GDP의 3.4%

o 부실채권 정리방법

- 부실채권 : 90일 이상 연체
-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리
 - *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은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보조로 간주

o 정리결과 : 대형은행의 국유화 후 민영화 재추진

<Finland

o 위기기간 : '91-'96

o 발생원인

- 금융자율화에 따른 lending boom
- 세제개편 등에 따른 거품경제의 급속한 소멸 및 부동산가격 폭락으로
금융기관 대출 부실화
 - * 3 bad : (1) bad policies(거시경제정책, 금융감독 미비)
(2) bad banking(금융기관의 moral hazard)
(3) bad luck(유가하락, 소련경제붕괴 등 경제환경변화)

o 기간중 거시지표 변동

- 성장률의 하락 : '91년 -7.1%
- 실업률의 증가 : '93년 17.9%
- 경상수지 적자 확대 : '91년 -7.3%/GDP
- '85년대비 주가변동 : 264% --> 62%

o 진행과정

- '91년 들어 대부분의 저축은행 및 일부 상업은행의 부실화
- 총자산대비 은행수익률 : '92년 -1.5%

o 정부지원 원칙

-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중점을 두어 대처
 - . 정부기금 또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예산으로 적극 지원
- 최대한 상업베이스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을 최대한 회수
 - . 정부의 주식인수 및 은행별 자구계획 징구로 기존 주주 및 경영진
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

- . 국제적 컨설팅기관 등 외부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기관의 인원을 최소화
- . 매수은행지분의 외국을 포함한 일반에 매각, 실현수익을 회수함으로써 일종의 stock option 효과 시현

o 지원내용

- '93.2월 정부는 모든 은행 지급보증 선언
- '92.4월 정부보증기금 설립(정부의 출자 및 지급보증 담당)
- 부실채권정리기관 설립('93.11 Arsenal, '93.4 Siltapankki)
- 통합 금융감독청 설립('93년)

o 지원규모 : 710억FIM(134억U\$)

* GDP의 14.9%

o 부실채권 정리방법

- 주요 대형부실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관이 담당

o 정리결과 : KOP 및 UBF은행 합병

